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81
----------	-------

발의연월일 : 2022. 10. 21.

발 의 자 : 윤한홍 · 권성동 · 박성중  
서범수 · 서일준 · 엄태영  
윤주경 · 윤창현 · 이달곤  
이채익 · 홍문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계좌로 자금을 송금·이체 받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방식 등으로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증가(’18년 2,457건 → ’21년 22,752건) 하고 있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의 하나인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적용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기이용계좌를 특정하더라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받기 전에 피해금이 인출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형법」 상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로 범죄수익에 비해 그 처벌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

임.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보아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이와 별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행위에 자체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켜 범죄 행위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속하고 용이하게 피해금이 환급되도록 하는 등 신중수법에 따른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조력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미수범도 처벌함으로써 범죄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함(안 제2조).

자금의 송금·이체와 함께 현금의 전달 행위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으로 정의함.

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허용함(안 제3조·제6조).

수사기관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금융회사에 피해자 및 피해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한 이내에 수사기관이 피해자 및 피해액을 특정하여 금융회사에 통지하도록 규정함.

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에게 형법상 사기죄 보다 강화된 형벌을 부과하고 조력행위자도 처벌함. 또한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하여 처벌함.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송금·이체된”을 “송금·이체되거나 피해자가 제공한 현금이 입금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금전”을 “금전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현금”으로 한다.

다.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

제3조제1항 중 “피해자”를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신청 및 제2항”을 “신청과 제2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대면편취형 전기통신금융사기”라 한다)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을 “신청이나 제3조제2항 또는 제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청을 한 피해자”를 “신청을 하였거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정된 피해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단서 중 “제공한”을 “제공한 경우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다만, 대면편취형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수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제7조제2항 중 “피해자”를 “피해자(대면편취형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정된 피해자를 의미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피해자”를 “피해자(대면편취형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정된 피해자를 의미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피해자”를 “피해자(대면편취형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정된 피해자를 의미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피해자”를 “피해자(대면편취형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정된 피해자를 의미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하고,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로 한다.

-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②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자 또는 해당 행위를 도운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2. ----- ----- ----- ----- ----- -----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다.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u>
2의2.·3. (생    략)	2의2.·3. (현행과 같음)
4.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u>송금·이체된</u>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4. ----- ---- <u>송금·이체되거나 피해자가 제공한 현금이 입금된</u> -----.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	5. -----



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  
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6.·7. (생략)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피해  
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  
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  
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  
---- 금전이나 피해자가 제공  
한 현금-----.

6.·7. (현행과 같음)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제2조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  
해를 입은 피해자-----  
-----  
-----.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  
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이하 “대면편취형 전기통신금  
용사기”라 한다)에 사용된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  
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한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 4.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  
-----  
-----  
-----  
-----  
-----.

⑤ ----- 신청과 제2항부터 제4항-----

-----  
-----  
-----.

제4조(지급정지) ① -----

-----  
-----  
-----  
-----  
-----  
-----  
-----  
-----.

1. ----- 신청이나 제3조제2항 또는 제3조제4항-----
2. ~ 4.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3. 4. (생략)

5. 수사기관.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④ (생략)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

②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신청을 하였거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정된 피해자

3. 4. (현행과 같음)

5. -----  
----- 제공한 경우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한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  
----- 경우(다만, 대면편취형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

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②·③ (생략)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①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  
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  
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다)-----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  
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  
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을 제5  
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  
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  
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  
청하여야 한다.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생략)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생략)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④ 제3항-----  
-----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피해자(대면편취형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정된 피해자를 의미한다) -----  
-----.

③ (생략)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

② (생략)

③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채권의 소멸)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명의인,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피해자(대면  
편취형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  
우에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정된 피해자를  
의미한다) -----  
-----.

제9조(채권의 소멸) ② -----

-----  
-----  
-----  
-----  
----- 피해자(대면편취형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제3조제3  
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  
정된 피해자를 의미한다) -----  
-----  
-----  
-----



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요청·제공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자 또는 해당 행위를 도운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p>③ 상습적으로 <u>제1항</u>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p>④ ----- <u>제1항 또는 제2항</u> ----- -----.</p>
---	---